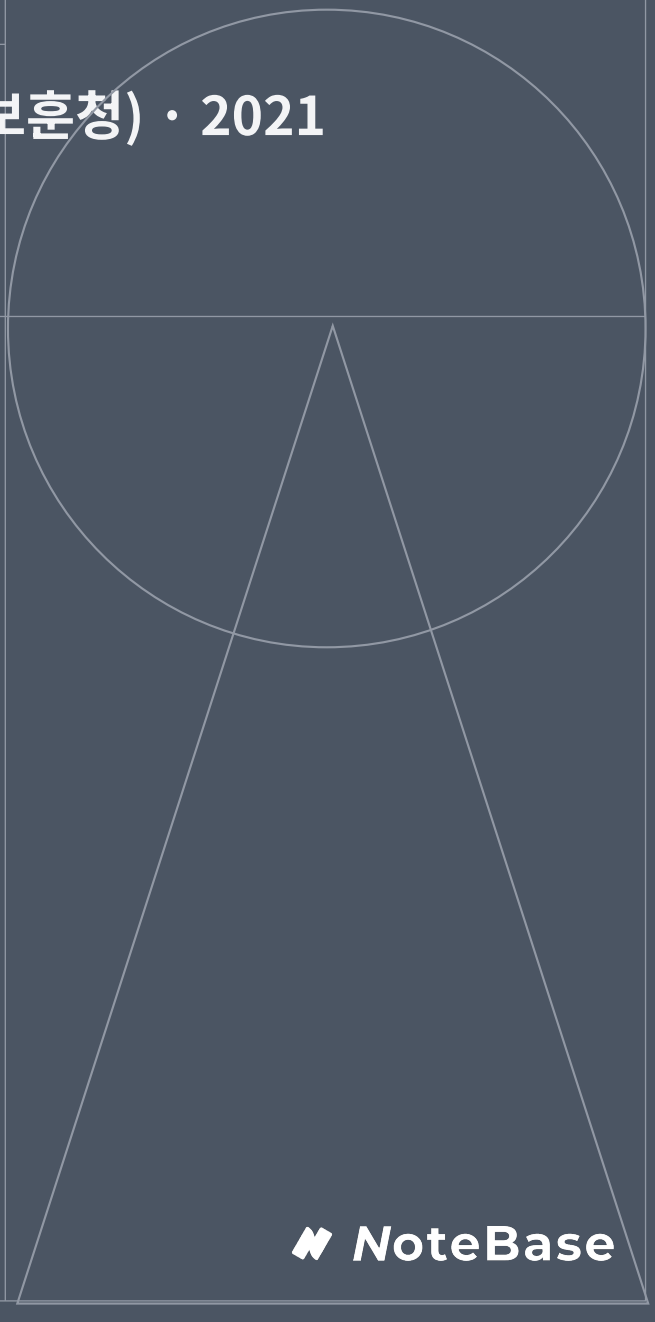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1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보훈청) · 2021

문 1. <보기>는 정치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 :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을(乙) : 직장이나 가족 등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① 갑(甲)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② 을(乙)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본다.
③ 갑(甲)에 비해 을(乙)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④ 갑(甲)과 달리 을(乙)의 관점은 정치 활동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갑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한 활동**으로 한정하므로, 국가가 형성되기 전 집단에서 이루어진 갈등 조정은 정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은 정치를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는 국가 현상설의 관점이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관계나 갈등 조정을 정치 현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X: 을은 직장이나 가족에서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정치를 **여러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집단 현상설의 관점이다.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갑이다.

③ X: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노동조합·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을의 관점은 이런 활동까지 정치에 포함하므로, 갑보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X: 을은 직장이나 가족 등에서 구성원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본다. 따라서 정치 활동의 주체를 **소수의 통치 엘리트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사회 집단의 일반 구성원까지 포함한다.

NoteBase

문 2. <보기>는 갑(甲)국의 현행 선거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부이다. 현행 선거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지역구 의원 총수는 200명으로 변동이 없다.)

<보기>

현행	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안	제21조 하나의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회 의원의 정수는 2~4인으로 한다.

① 총 선거구 수가 증가한다.

②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③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커져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이 1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되기 쉬워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현행법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이고, 개정안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원 총수는 200명으로 같으므로, 선거구별 선출 인원이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판단해야 한다.

① X: 의원 총수가 200명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한 선거구가 선출하는 의원 수가 늘어나므로 **총 선거구 수는 감소한다**. 현행법에서는 200개 선거구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한 선거구가 여러 의석을 담당하므로 그보다 적은 선거구가 필요하다.

② X: 사표는 투표했지만 의석 획득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뜻한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으면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에게 간 표가 모두 사표가 되기 쉽다. 개정안에서는 여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 현행 방식보다 **사표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주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다.

③ O: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으면 가장 강한 후보 외에 다른 후보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보다 **소수 정당 후보의 의회 진출**이 쉬워져,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X: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커지므로, 개정안이 다수당의 출현과 정국 안정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다수당 형성과 정국 안정에 유리한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지가 여러 후보로 나뉘어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후보가 의석을 차지하므로 큰 정당에 의석이 집중되기 쉽다.

NoteBase

문 3. <보기>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 안 된다. 또한 자신이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며 탐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다.
③ 사회·문화 현상은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④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머물지 않고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인과 원리**를 살피는 것은 반성적 태도이다. 자신의 연구 절차·방법·윤리 준수 여부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이 태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는 것은 **객관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보기에서 강조하는 반성적 태도는 현상의 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연구 과정을 점검하는 태도이다.

② X: 경험적 근거로 검증되기 전에는 주장을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방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 결과를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증거나 비판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을 인정한다. 보기의 초점은 이러한 수정 가능성보다 현상의 숨은 원인과 연구 과정 자체를 되짚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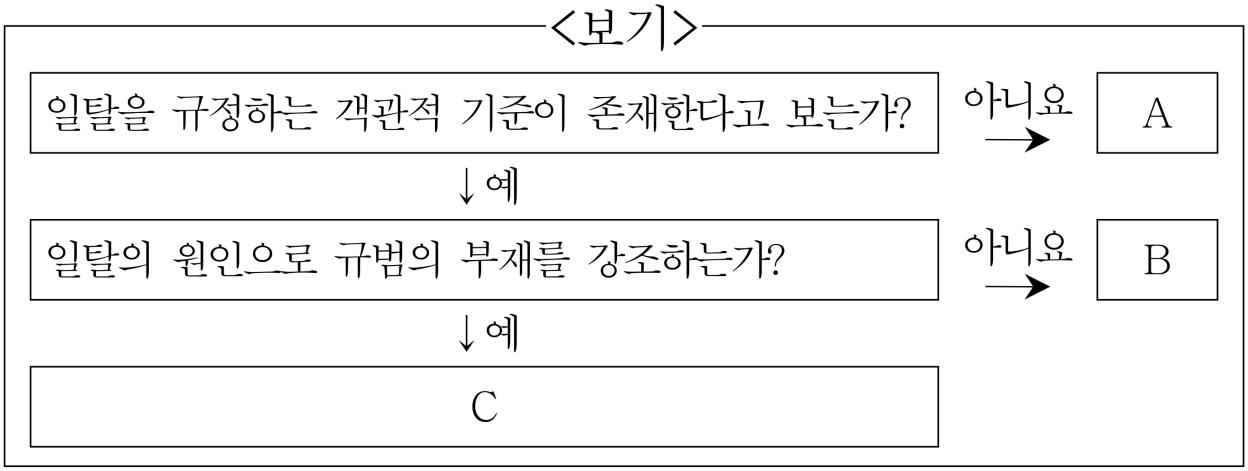
③ X: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이해하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같은 현상도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보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맥락에 따른 의미의 차이보다 현상의 이면과 자신의 탐구 과정을 살피는 반성적 태도이다.

④ O: **반성적 태도**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의 원인이나 원리를 능동적으로 살피며, 자신의 탐구 과정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태도이다. 보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은 숨은 원인과 원리를 살피라는 뜻이고, 연구 절차·방법·윤리를 지키는지 되짚으라는 말은 연구자 자신의 탐구 과정도 점검하라는 뜻이다.

NoteBase

문 4. <보기>는 일탈 이론을 A~C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중 하나이다.)

<보기>



① A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B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고 본다.

③ C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차단을 강조한다.

④ B는 A, C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B는 일탈의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규범의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과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식에서 A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질문에 '아니요'로 답하므로 낙인 이론이다. 낙인 이론은 행위 자체보다 타인의 규정과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B와 C는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되, 규범의 부재를 강조하지 않는 B는 차별적 교제 이론, 이를 강조하는 C는 아노미 이론이다.

① X: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탈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한다.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할 때, 목표는 받아들이면서 수단은 비합법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A인 낙인 이론은 일탈자로 규정된 사람이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일탈을 반복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② O: B인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을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학습**한다고 본다. 일탈에 우호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일탈의 방법뿐 아니라 동기와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배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③ X: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차단은 B인 차별적 교제 이론**에 부합하는 대책이다. 일탈 학습의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C인 아노미 이론에서는 규범의 부재나 약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같은 사회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주목한다.

④ X: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은 C인 아노미 이론**, 특히 규범의 부재나 약화를 강조하는 뒤르켐의 관점에 부합하는 대책이다. B인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을 학습하는 교제 관계를 줄이고 정상적인 규범을 학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목한다.

NoteBase

문 5. <보기>는 형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종류	예
(㉠)	사형
(㉡)	징역, (㉢), 구류
명예형	(㉣), 자격 정지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① ㉠은 생명형이다.

② ㉡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③ ㉢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류와 구분된다.

④ ㉣에 의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박탈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금고이며, 금고와 구류는 **모두 정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정역, 즉 정해진 노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징역과 금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표에서 ㉠의 예는 사형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생명형에 해당한다.

② O: 표에서 징역·금고·구류를 묶는 ㉡은 자유형이다. 자유형은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이다.

③ X: ㉢은 금고이다. 금고와 구류는 모두 정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정역의 부과 여부로 둘을 구분할 수 없다. 형법 제67조·제68조에 따르면 정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징역이고, 금고와 구류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금고와 구류의 차이는 **수용 기간**에 있다. 금고는 무기 또는 1개월 이상의 유기형인 반면,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단기 자유형이다.

④ O: 명예형에 속하면서 자격정지와 함께 제시된 ㉣은 자격상실이다. 자격상실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상실**하게 하는 형벌이다. 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NoteBase

문 6.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

<보기>
상속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갑(甲)은 해당 민법 규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A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갑(甲)은 B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A는 갑(甲)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있다.

② 갑(甲)은 소송 중이 아니라도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甲)이 청구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A, B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법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A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고, B는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이다. 지문에는 '법률에 어긋난다며'라고 적혀 있지만, 위헌 법률 심판에서 심사하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① O: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따라서 A는 갑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심판을 제청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② X: ㉠의 신청은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고,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소송 없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③ X: 갑은 법원에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구제를 구하는 절차이다.

④ X: 법원의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법관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국회 등이 구성 과정에 관여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는다.

NoteBase

문 7. <보기>의 표는 A 민족과 B 민족 간의 교류로 인한 두 민족의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A 민족	B 민족
T 시기	○, □, △	●, ■, ▲
T+1 시기	○, ●, □, △	●, ■, □, ▲
T+2 시기	◎, ■, △	●, ■, △

* ○, □, △는 순서대로 A 민족의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임.
* ●, ■, ▲는 순서대로 B 민족의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임.
* ◎는 ○의 성격과 ●의 성격을 모두 지니면서 새로운 성격이 가미된 의복 문화임.

① $T+1$ 시기 A 민족은 B 민족과 달리 문화 공존(병존)이 나타났다.

② T 시기에서 $T+1$ 시기로 가면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③ T 시기 이후 $T+2$ 시기에 이르기까지 A 민족과 달리 B 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

④ T 시기에 비해 $T+2$ 시기의 A 민족 문화 변동에서 의복 문화는 음식 문화, 주거 문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 민족의 의복 문화는 두 민족의 성격을 함께 지니면서 새로운 성격이 더해진 ◎로 바뀌었으므로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 음식 문화는 B 민족의 것으로 대체되었고, 주거 문화는 기존 모습이 유지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문화 공존(병존)은 기존 문화와 외래문화가 각각의 성격을 유지한 채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다. $T+1$ 시기에 A 민족의 의복에는 ○와 ●가, B 민족의 음식에는 ■와 □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두 민족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② X: 자료의 문화 변동은 두 민족 간의 교류로 상대 민족의 문화 요소가 전해져 발생하였다. 이는 **문화 전파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변동이다. 내재적 요인은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기는 발명이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발견이다.

③ X: B 민족은 $T+1$ 시기와 $T+2$ 시기에 의복 ●뿐 아니라 **음식 ■도 유지**하고 있다. A 민족도 같은 기간에 기존 주거 문화 △를 유지하며, $T+2$ 시기의 의복 ◎에는 자문화인 ○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B 민족의 의복 문화에서만 자문화 요소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O: A 민족의 의복은 T 시기의 ○에서 $T+2$ 시기의 ◎로 변하였다. ◎는 ○와 ●의 성격을 함께 지니면서 새로운 성격이 더해진 문화이므로 **문화 융합**이다. 반면 음식은 기존의 □가 B 민족의 ■로 대체되었으므로 문화 동화이며, 주거는 △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다.

NoteBase

문 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서로 다른 민법의 원칙에 해당한다.)

<보기>
· A는 ㉠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 자기 책임의 원칙은 B로 수정되었다.
· C는 D로 수정·보완되었다.

① ㉠은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② ㉡에 따라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C는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D는 C와 달리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으려는 원칙이다. 형식적인 합의만으로 계약의 실질적 공정성까지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계약 체결 여부·상대방·내용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더라도, 경제적 강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의 실질적 공정성**을 중시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

② X: ㉡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자신의 위법한 가해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은 **B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보완한다.

③ X: C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소유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D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X: **C와 D 모두 사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D는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행사에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두 원칙의 차이는 사적 지배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강조하는 데 있다.

NoteBase

문 9. <보기 1>의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보기 1>
⊙ 학습 주제 : 빈곤 유형
1. A
-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A 가구로 분류함
2. B
-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B 가구로 분류함
<보기 2>
ㄱ. A에 해당하는 가구는 B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B의 빈곤선도 높아진다.
ㄷ. A는 주로 선진국에서, B는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
ㄹ.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빈곤의 유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상대적 빈곤의 기준인 **중위 소득의 50%**는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함께 높아진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소득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B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이다. 제시문에서 A의 기준은 최저 생계비, B의 기준은 중위 소득의 50%이다. 중위 소득은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이다.

ㄱ. X: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한 가구가 두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위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면 A와 B에 모두 해당한다.

ㄴ. O: B의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제시문처럼 그 비율이 50%이면 중위 소득이 높아질 때 빈곤선도 높아진다. 이는 빈곤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빈곤 가구 수가 반드시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ㄷ. X: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하기 어려운 **저개발국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이고, 상대적 빈곤은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A를 선진국, B를 저개발국의 주된 빈곤 문제로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두 빈곤 유형 모두 선진국과 저개발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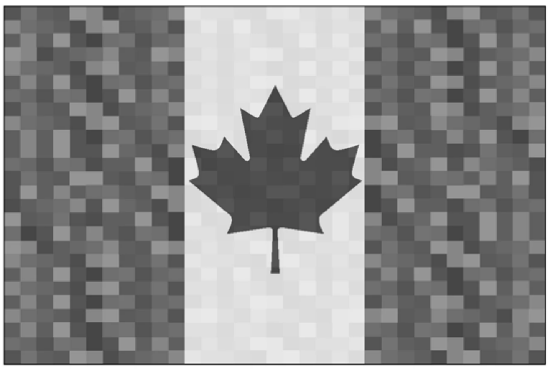
ㄹ. O: 제시문에서 A는 최저 생계비, B는 중위 소득의 50%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류된다. B의 '상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생활 수준과 비교한다는 뜻이지, 개인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와 같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각각의 인종이나 민족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개의 조각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이 되는 '모자이크'와 같다고 하여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한다.

①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②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다.

③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④ 인위적으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모자이크 정책은 각 인종·민족이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바꾸기보다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을 중시한다.

공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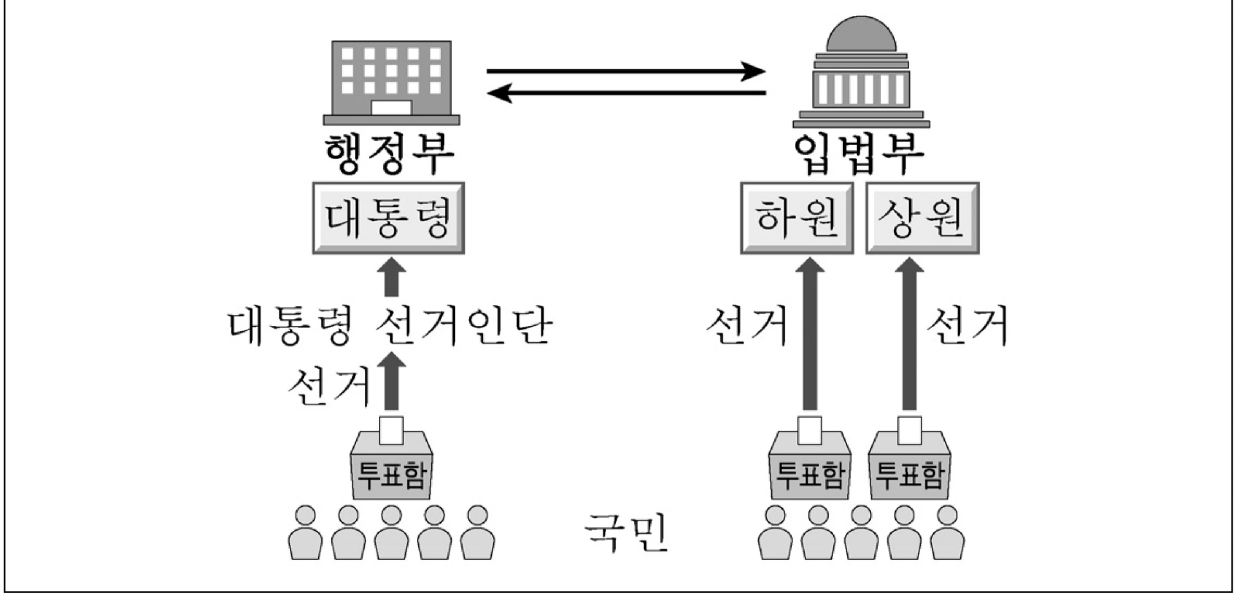
보기의 모자이크 정책은 여러 조각이 각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 각 인종·민족이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다문화 정책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보므로,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이 그 바탕이 된다.

이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 통합은 **문화를 하나로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거나 인위적으로 여러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를 버리도록 요구하는 대신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인정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와 같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②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③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④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민이 의회와 별도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이므로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견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는 국민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와 별도로 상원과 하원 의원을 선출한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각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구조이다. 두 기관 사이의 화살표는 상호 견제 관계를 나타낸다.

① O: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의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X: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립하지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존립하지 않으므로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X: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립에 따라 **의회 의원과 행정부 장관의 겸직이 금지**된다.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에서 볼 수 있다.

④ X: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와 별도로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글에 나타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 유기체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를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한다.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 부분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① 사회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② 사회 현상을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③ 사회 갈등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④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회의 각 부분이 전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은 기존 질서의 안정과 유지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불평등한 질서까지 정당화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고, 각 부분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능론의 관점이다. 기능론은 사회의 여러 부분이 서로 의존하며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한다고 본다.

① X: 사회를 불평등의 재생산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갈등론은 지배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와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유지한다고 본다. 기능론은 사회를 단순히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보기보다 **각 부분의 기능과 사회 전체의 통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② X: 개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같은 **미시적 관점**이다. 기능론은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구조와 제도가 전체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③ X: 사회 갈등을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기능론은 갈등을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보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균형**을 통한 질서 유지를 강조한다.

④ O: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전체의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기존 제도에 담긴 불평등이나 지배 관계를 충분히 비판하지 못하면, 현재의 질서를 정당화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NoteBase

문 13. <보기 1>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 갑(甲)(16세)은 전자 제품 박람회에서 만난 판매 사원 A(32세)로부터 고가의 컴퓨터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입하였다.
· 을(乙)(17세)은 B(45세)가 운영하는 휴대 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위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한 후 고가의 휴대 전화를 구입하였다.
<보기 2>
ㄱ. 갑(甲)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A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A는 거래 당시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ㄷ. 을(乙)의 법정 대리인은 B에게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을(乙)의 법정 대리인은 을(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거래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A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을처럼 동의서를 위조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구입한 갑은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권은 법정 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인정**된다(민법 제140조). 따라서 갑은 법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A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ㄴ. O: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측의 추인, 즉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는 의사 표시가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이러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거래한 A는 철회할 수 없다.

ㄷ. X: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민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례에서는 동의서 위조라는 속임수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취소도 제한된다.

ㄹ. O: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상대방을 믿게 하였다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취소권이 배제된다(민법 제17조 제2항). 을이 위조한 동의서를 제시하여 B가 동의가 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을 본인뿐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글에서 A국 사람과 B국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존의 개방형 벽난로에 익숙하던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폐쇄형 철제 난로가 새롭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본 A국 사람들은 A국의 개방형 벽난로가 설치비가 덜 든다고 치켜세우며, B국의 난로는 방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다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하여 답답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비난했다. 반대로 B국 사람은 폐쇄형 난로가 개방형 난로보다 네 배나 많은 열을 발산하면서도 연료가 덜 들고, 굴뚝 청소를 할 필요도 없다는 등 장점을 늘어놓으며 A국의 난방법을 비난했다.

① 자국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② 다른 나라와의 문화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자국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④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적 태도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두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난방법의 장점만 강조하고 상대 나라의 난방법을 낮게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자기 문화를 더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A국 사람들은 설치비와 실내 밝기 등을, B국 사람은 열효율과 연료 절약 등을 내세워 자기 나라 난방법을 치켜세우고 상대 나라의 난방법을 비난하므로, 두 나라 사람들 모두 이 태도를 보인다.

① O: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높인다. 구성원들이 같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소속감을 공유하면 **집단 내부의 결속**이 강화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② X: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열등하게 평가하고 배척하면 상대의 반발을 일으켜 **문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문화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각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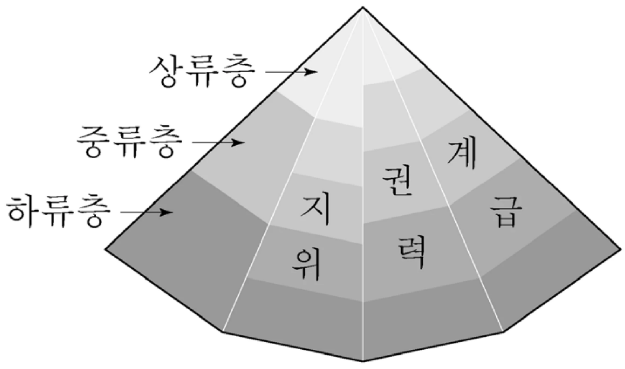
③ X: 자국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 태도는 외국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오히려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④ X: 문화의 특수성을 내세워 인권 침해까지 용인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이다. 제시문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며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문 15. <보기>에서 표현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사회 불평등은 한 가지 측면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계층은 지위, 권력, 계급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므로 단순한 관계 설정은 불가능하다.

①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이다.

③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가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④ 계층 간에는 적대적인 의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보기는 사회 불평등을 경제적 계급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으로도 설명하는 **다원적 계층론**이다. 각 기준에 따른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재산은 많지만 사회적 명망은 낮은 것과 같은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베버의 다원적 계층론을 나타낸다. 그림의 계급은 경제적 위치, 지위는 사회적 명예나 위신, 권력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이 관점은 세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① X: 다원적 계층론은 **경제적 불평등도 인정**한다. 다만 경제적 위치만으로 모든 불평등을 설명하지 않고, 사회적 명예와 정치적 권력도 함께 고려한다.

② O: 지위 불일치는 한 개인이 여러 계층화 기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서로 다른 현상이다. 예를 들어 소득은 높지만 사회적 명망은 낮을 수 있다. 다원적 계층론은 **기준별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③ X: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불평등의 근원으로 보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구분한 것은 **마르크스의 계급론**이다. 보기의 다원적 계층론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명예와 정치적 권력을 불평등의 요인으로 본다.

④ X: 다원적 계층론은 계층 간에 **적대적인 의식이 반드시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경제적 위치, 사회적 명예, 정치적 권력에 따른 구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경제적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적대의식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립하는 계급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강조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가깝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헌법 전문)
(나)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헌법 제32조 ①)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②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고용·적정 임금의 보장은 모두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공통 해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다.

(가)의 헌법 전문은 국민 생활이 고르게 향상되는 것을 국가가 추구할 목표로 제시한다. (나)의 헌법 제32조 제1항은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할 기회와 적정한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이므로, 두 규정에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뒷받침하려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공통으로 나타난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국제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설명하는 후보들은 이러한 생활 보장 책임을 설명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보기 1>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이다.
<보기 2>
ㄱ.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ㄷ.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ㄹ. 사회의 속성은 개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회가 개인과 별개로 실재하지 않고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보는 **사회 명목론**이다. 이 관점은 개인의 자유 의지와 능동성을 중시하며, 사회 규범도 **개인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에 붙인 이름이라고 보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 반면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ㄱ. O: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를 형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구속력보다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우선한다.

ㄴ. X: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가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행동과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ㄷ. O: 사회 명목론은 사회 규범을 개인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로 보지 않는다. 개인들이 그 규범을 옳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등 **구성원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규범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ㄹ. X: 사회의 속성을 개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는 뜻으로, 사회 실재론의 주장이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특성과 행동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보기 1>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은 ㄱ과 ㄷ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합은 ②이다.

NoteBase

문 18. <보기 1>에 나타난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더욱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 가는 것처럼 사회도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를 향하여 변화한다.
<보기 2>
ㄱ.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ㄴ. 전통성과 근대성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ㄷ. 사회 변동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ㄹ.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발전한다는 설명은 **진화론**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사회 변동을 **진보와 발전**으로 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은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하며,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화한다고 보는 진화론을 설명한다.

ㄱ. O: 진화론은 사회가 변동하면서 이전보다 발전된 상태로 나아간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ㄴ. O: 진화론에 기초한 근대화론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발전 과정으로 본다. 전통적 요소를 발전의 장애로 여기고 근대적 요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므로, **전통성과 근대성을 양립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파악한다.

ㄷ. X: 사회가 주기적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이다. 순환론은 사회가 생성·성장·쇠퇴·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지만,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본다.

ㄹ. X: 미래의 사회 변동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순환론에 대한 비판**이다. 과거 문명의 흥망성쇠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데 치중하므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변동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옳은 보기는 ㄱ, ㄴ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사례에서 갑(甲)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보기>
갑(甲)은 2020년 8월 모 공원 근처에서 살인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갑(甲)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풀려났지만, 1심 재판과 항소심 기간을 합쳐 1년 간 교도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① 보석 제도
② 형사 보상 제도
③ 배상 명령 제도
④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갑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구금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통 해설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절차에서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 등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미결구금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 등을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갑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으므로, 그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에 머문 1년의 구금에 대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에서 구제하려는 피해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 중 구금되어 입은 손해**이므로 형사 보상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글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 각국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사회는 홉스(Thomas Hobbes)가 주장하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고,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① 국제법과 국제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추구한다.
③ 계몽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④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다른 국가의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선지별 해설

보기는 국가를 국제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자국 이익의 추구와 국가 간 갈등을 강조하므로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여기서 무정부 상태란 정부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들 위에서 질서를 강제할 상위 권력이 없다는 뜻이다. 현실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스스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① X: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 관점**이다. 현실주의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보다 국가의 힘과 자국의 이익을 국제 정치의 핵심 요인으로 본다.

② X: 침략국에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 안보**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상주의 관점이다. 현실주의는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동맹을 맺어 상대국의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을 중시한다.

③ X: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인간의 이성과 대화·협력을 통한 평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 관점**이다.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며, 대화와 협력만으로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④ O: 현실주의는 특정 국가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른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군비 증강이나 동맹을 통해 **상대국의 힘을 견제**하고, 어느 한 국가도 쉽게 다른 국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세력 균형을 이루어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NoteBase